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

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

2021. 12. 1(수)

민성희 연구위원

국토연구원 KRIHS

01 지역적 분포 현황

1 공간적 양극화 심화

- 인구감소 및 4차 산업혁명 등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고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여 인구분포의 공간적 양극화 심화 전망
  - 특·광역시를 제외한 147개 시·군 지역 중 인구 10만명 이하 87개 시·군이 전 국토의 59.4%를 차지하나 인구는 8.34%에 불과
  - 지방 소도시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는 대도시에 비하여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의 중심지기능 이탈 현상이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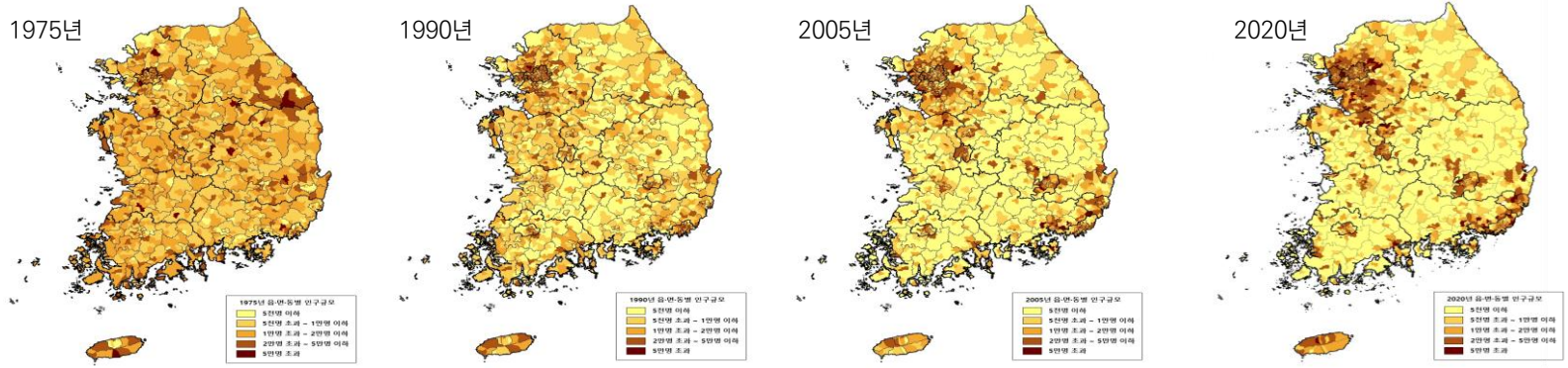
- 행정안전부가 2021년 1월 3일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, 2020년 처음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며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'인구 데드크로스(dead cross)' 발생
  -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,182만 9,023명으로 2019년 대비 20,838명(0.04%) 감소

-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, 2019년 12말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50%를 넘어섬
  - 2019년 12월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에 비하여 1,737명이 더 많았고, 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32,483명, 2021년 1월 말 기준으로 273,908명으로 증가함

2 인구의 지역적 분포 현황

- 인구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 등 대도시로 인구집중 현상이 발생하며,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두드러짐
  - 서울시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(24.4%)에 비해 2020년(18.5%)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나 인천, 경기를 고려한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.3%(2020년)로 꾸준하게 증가
  - 수도권을 제외한 일반도의 인구수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추세로 충남, 전남, 전북, 경북 등인 1975년 대비 2020년 인구가 절반수준으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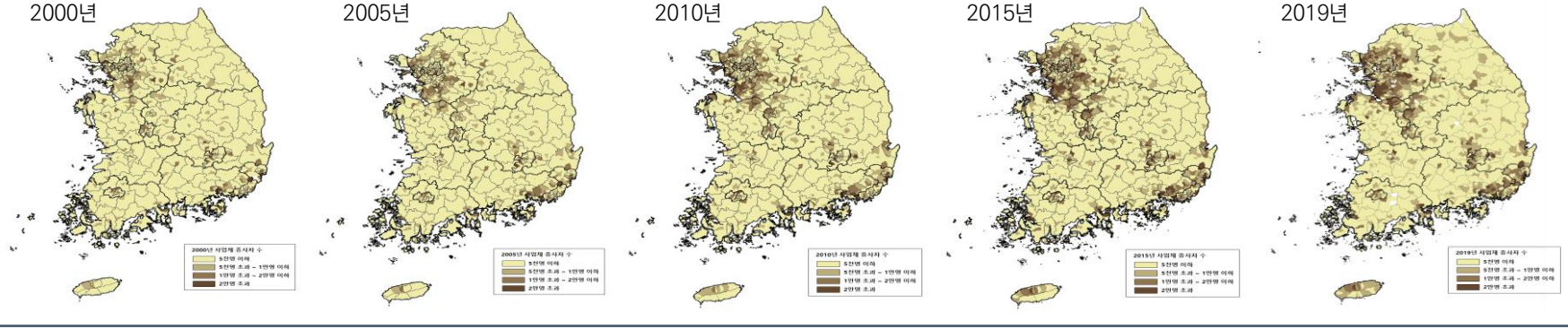
인구분포(읍면동), 1975~2020년



3 사업체 종사자의 지역적 분포 현황

- 종사자수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, 특히 수도권 종사자수의 절대규모와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크게 증가
  - 전체 종사자 수에서 서울시 종사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(26.3%) 대비 2019년(23.0%) 소폭 감소하나 수도권(49.0% → 51.2%)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
  - 수도권을 제외하면 충청권이 유일하게 종사자 수와 전체 종사자 중 차지하는 비중 모두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남(6.0% → 7.5%)

사업체 종사자(읍면동), 2000~2019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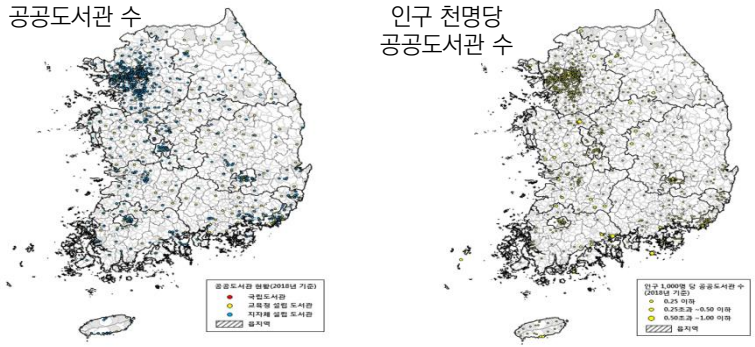
01 지역적 분포 현황

4 생활SOC의 지역적 분포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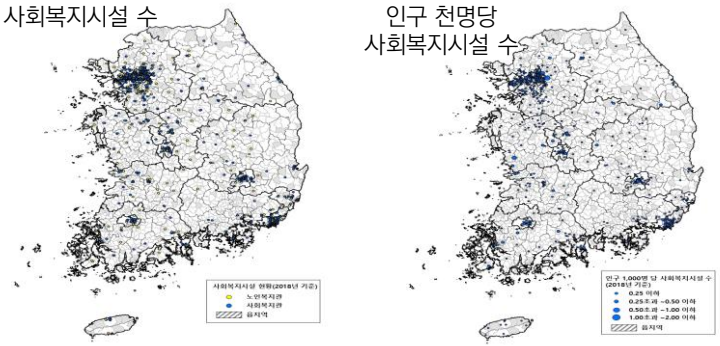
- **공공도서관**은 서울(142개), 경기(223개), 인천(46개)에 전체의 42.9%가 분포해 있으나, 인구 천명 당 공공공도서관 수는 강원, 전북, 전남, 제주가 약 0.03개로 전국 평균(약 0.02개)에 비해 높음

- **사회복지시설**은 서울(179개), 경기(145개), 인천(39개)에 전체의 43.5%가 분포하며, 인구 천명 당 사회복지시설 규모는 특·광역시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

공공도서관 분포(2018)



사회복지시설 분포(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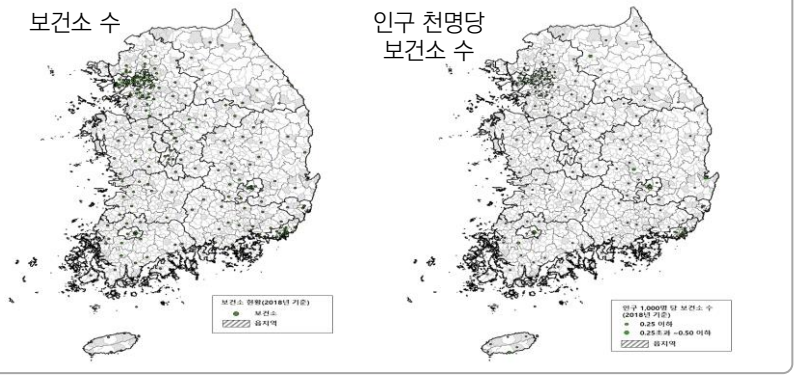


4 생활SOC의 지역적 분포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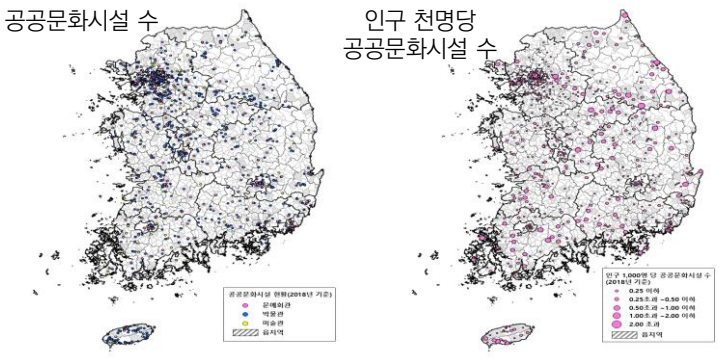
- **보건소**는 전체의 32.8%가 서울(25개), 경기(45개), 인천(9개)에 분포해 있으나, 인구를 고려할 경우 강원, 전남이 인구 천명 당 0.01개로 인구 당 보건소 수가 가장 많음

- **공공문화시설**은 서울(140개), 경기(173개), 인천(36개)에 전체의 33.1%가 분포해 있으며, 다른 생활 SOC에 비해 강원(114개)의 분포비중이 높아 인구 천명 당 시설 수도 강원이 약 0.07개로 제주(약 1개) 다음으로 높음

보건소 분포(2018)



공공문화시설 분포(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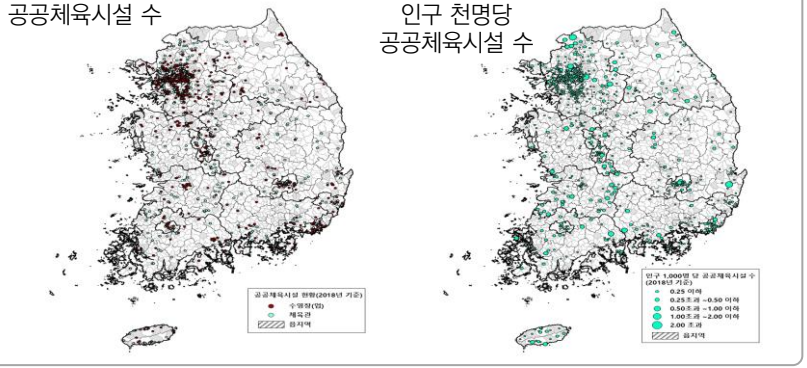


4 생활SOC의 지역적 분포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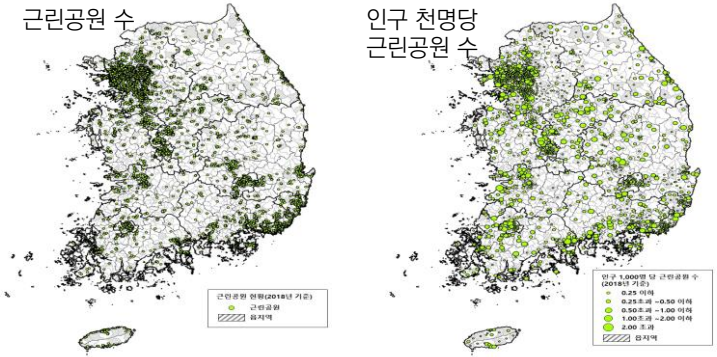
- **공공체육시설**은 서울(197개), 경기(394개), 인천(49개)에 전체의 43.7%가 분포해 있으나, 인구를 고려할 경우 제주(0.07개), 세종(0.05개)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시설 수가 많음

- **근린공원**은 서울(419개), 경기(1,325개), 인천(340개) 등 수도권에 전체의 40.5%가 집중되어 있으나 인구 천명 당 공원 수는 세종시가 0.3개로 가장 높음

공공체육시설 분포(2018)



근린공원 분포(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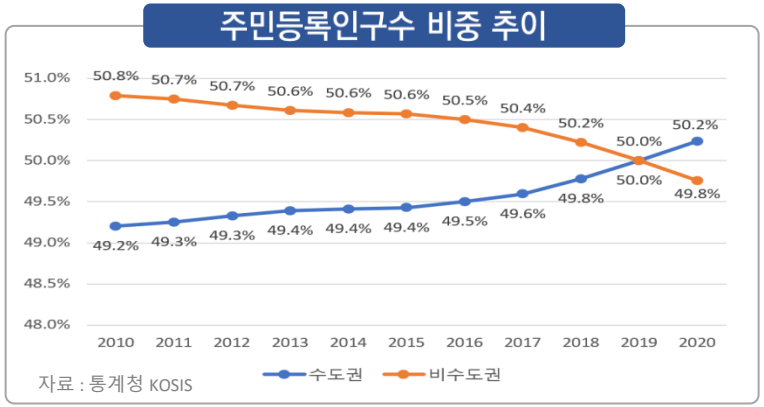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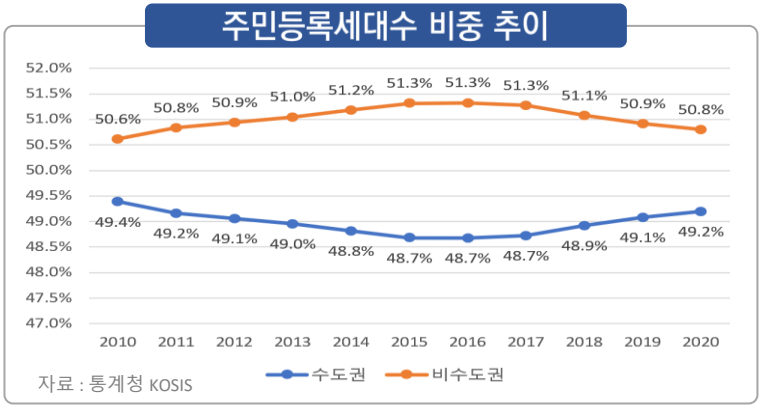
02 수도권 집중 현황

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세대수

- 인구는 비수도권의 비중이 높았으나,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
  - 2010년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49.2%에서 2019년 50%를 넘어서 2020년에는 50.2%를 차지

- 반면 세대수를 살펴보면 아직 비수도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
  - 2010년 수도권의 세대수 비중은 49.4%에서 2015년 48.7%로 감소하다 2020년 49.2%로 소폭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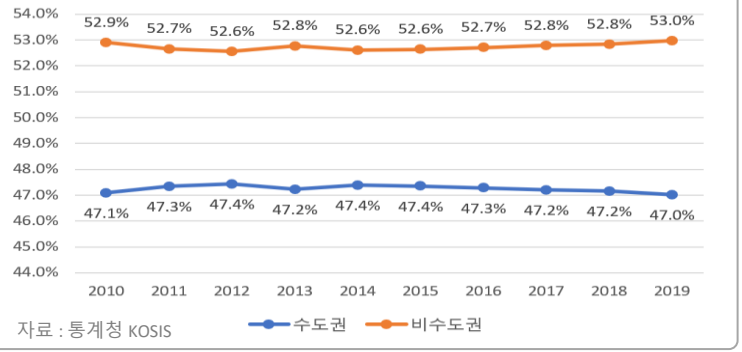




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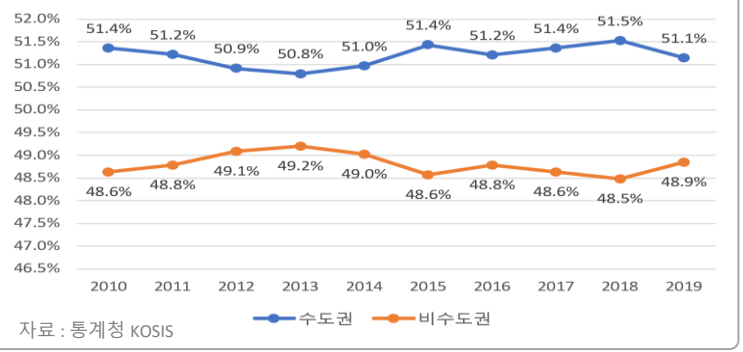
- 사업체수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은 비중, 종사자수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비중
- 수도권의 사업체는 비수도권보다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, 수도권의 사업체는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음

사업체수 비중 추이



자료 : 통계청 KOSIS

종사자수 비중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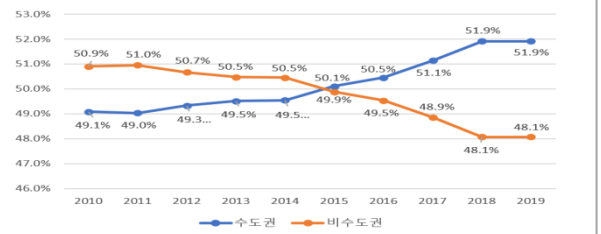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 KOSIS

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(GRD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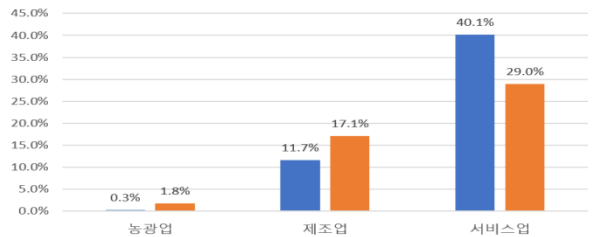
-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GRDP는 1,852조원이며, 이 중 51.9%인 961조원은 수도권, 48.1%인 890조원은 비수도권에서 차지
  - 2000년 이후 GRDP 추이를 보면, 201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GRDP가 비수도권을 추월하고 있는 상황
- 산업별로 살펴보면, 수도권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(전체의 40.1%), 비수도권은 제조업(전체의 17.1%) 및 농광업(전체의 1.8%)의 비중이 높음
- 제조업의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, 이는 수도권에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입지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임

GRDP의 수도권 비중 변화(2010~2019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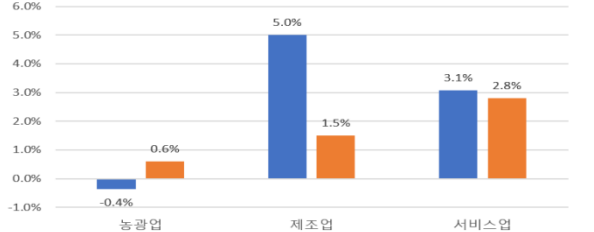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 KOSIS

2019년 산업별 GRDP 비중



자료 : 통계청 KOSIS

2010-2019년 산업별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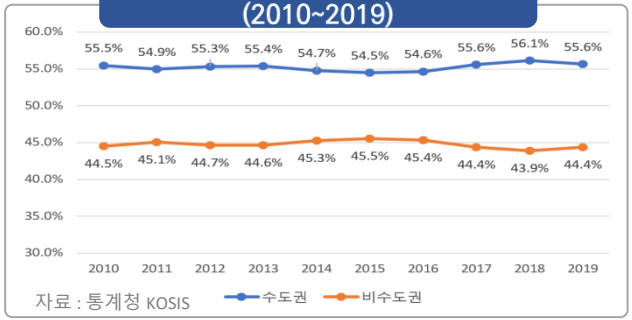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 KOSIS

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총소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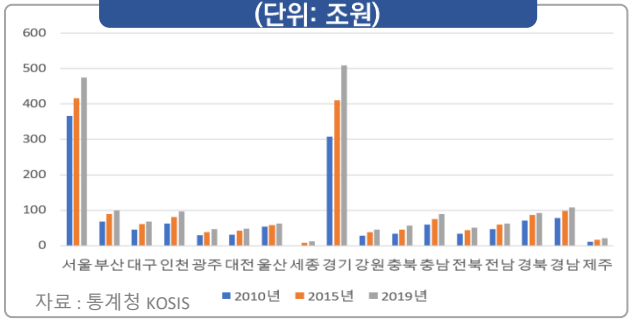
- 2019년 기준 지역 총소득의 수도권 비율은 55.6%(1,080조원), 비수도권 비율은 44.4%(861조원) 이며, 2010년부터 그 격차는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
  - 지역 총소득은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항상 크게 나타나는데, 소득의 상당부분이 수도권으로 유입됨을 의미
- 2019년 기준 지역 총소득은 서울 24.5%, 경기 26.2%로 두 지역이 50.7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 두 지역은 2010년도 50.8%로 시기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
- 지역 간 소득이전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으며, 특히 서울과 경기도로의 순유입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수도권이 소득 이전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지역 총소득의 비율변화 (2010~2019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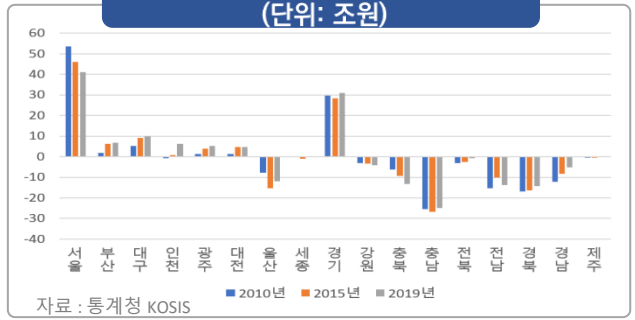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 KOSIS

광역시도별 지역 총소득 (단위: 조원)



자료 : 통계청 KOSIS

지역별 소득 순유입액 (단위: 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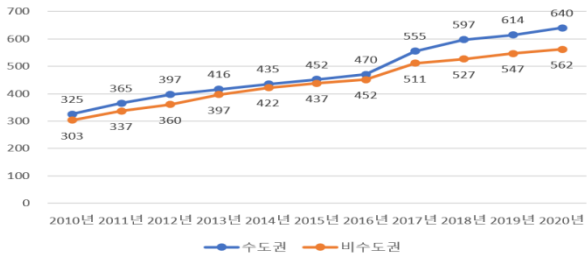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 KOSIS

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소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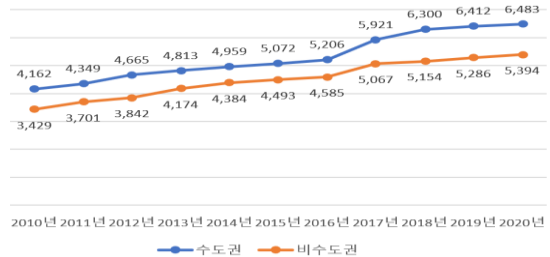
-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총소득은 1,202조원이며, 이 중 수도권은 53.2%인 640조원이며, 비수도권은 562조원으로 46.8%를 차지
-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가구당 평균소득은 5,924만원/가구이며, 수도권 6,483만원/가구, 비수도권 5,394만원/가구로 1,089만원 차이
  -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의 가구소득은 약 20%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나며, 2010년 이후 격차는 지속적으로 유지
- 수도권의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특징이 있으며, 연도별로 보면, 2010년과 대비하여 2020년은 재산소득의 비중증가와 사업소득의 비중감소의 특징이 나타남

가구소득 추이 (단위: 조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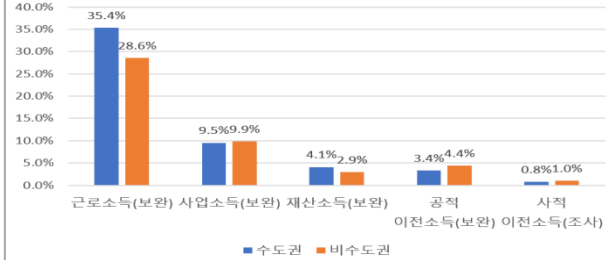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

가구당 평균소득 추이 (단위: 만원/가구)



자료 :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

소득 원천별 비중 비교 (2020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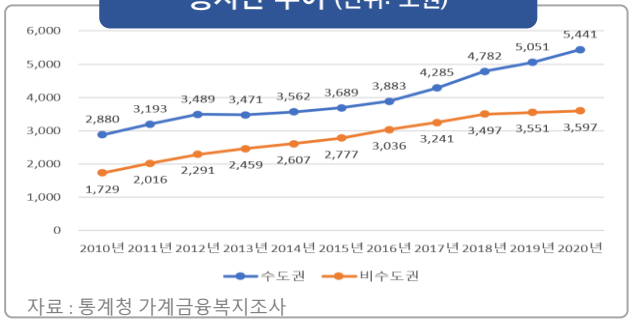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

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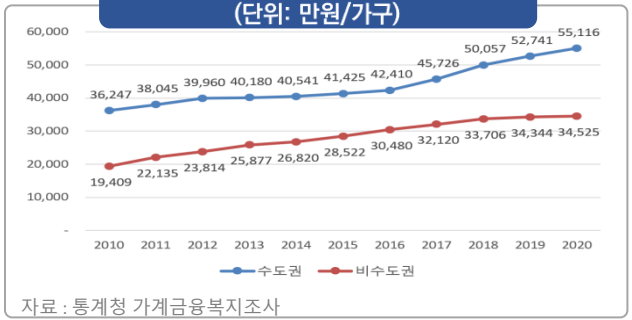
-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총자산은 9,038조원이며, 이 중 수도권은 60.2%인 5,441조원이며, 비수도권은 3,597조원으로 39.8%를 차지
- 2020년 기준 수도권의 가구당 자산은 평균 5억 5,116만 원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3억 4,525만 원으로 수도권의 62.6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다소 증가
- 2020년 기준 수도권의 가구당 자산은 평균 4억 4,4760만 원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2억 8,259만 원으로 수도권의 63.1%를 차지
  - 2012년부터 순자산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으나, 2018년을 기점으로 그 격차가 커짐

총자산 추이 (단위: 조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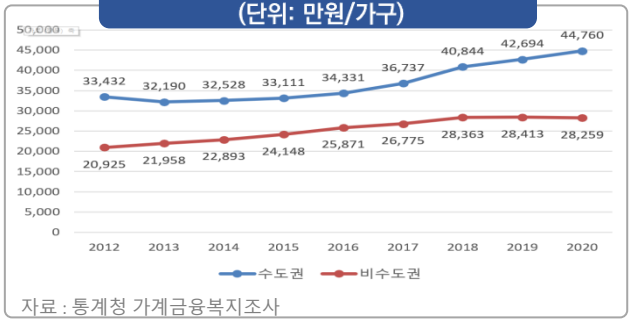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

가구당 총자산 추이 (단위: 만원/가구)



자료 :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

가구당 순자산 추이 (단위: 만원/가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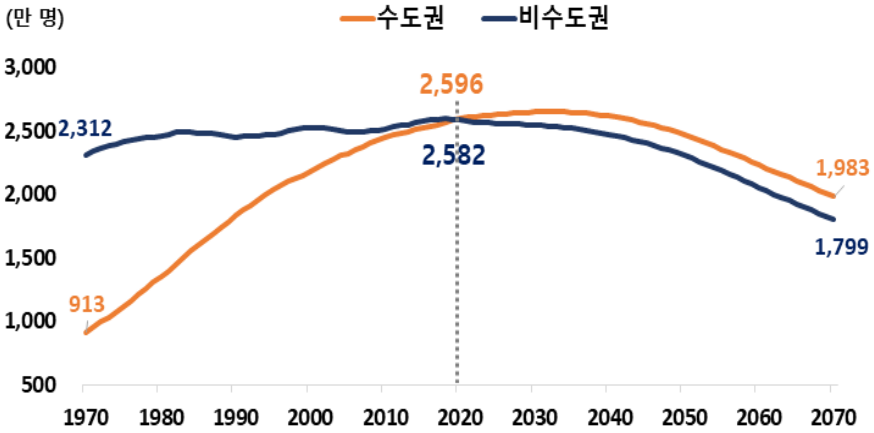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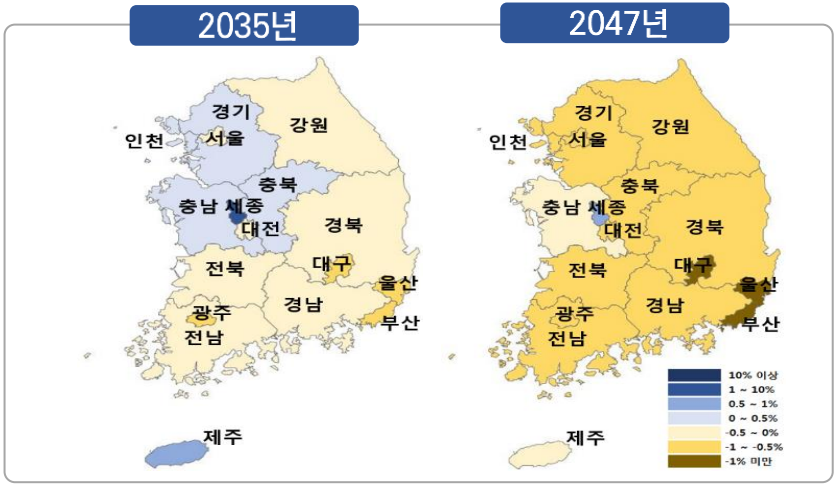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

0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의 필요성

1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위기 확산

- 2019년 12월, 역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
  - 전국토 중 11.8% 면적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
  - 수도권 과밀화는 주거문제 및 교통혼잡 등 비효율을 가속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
    *(주거)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('20년 기준) : 수도권(8.0배) 〉 전국(5.5배)
    *(교통)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35.4조(전국 대비 52.2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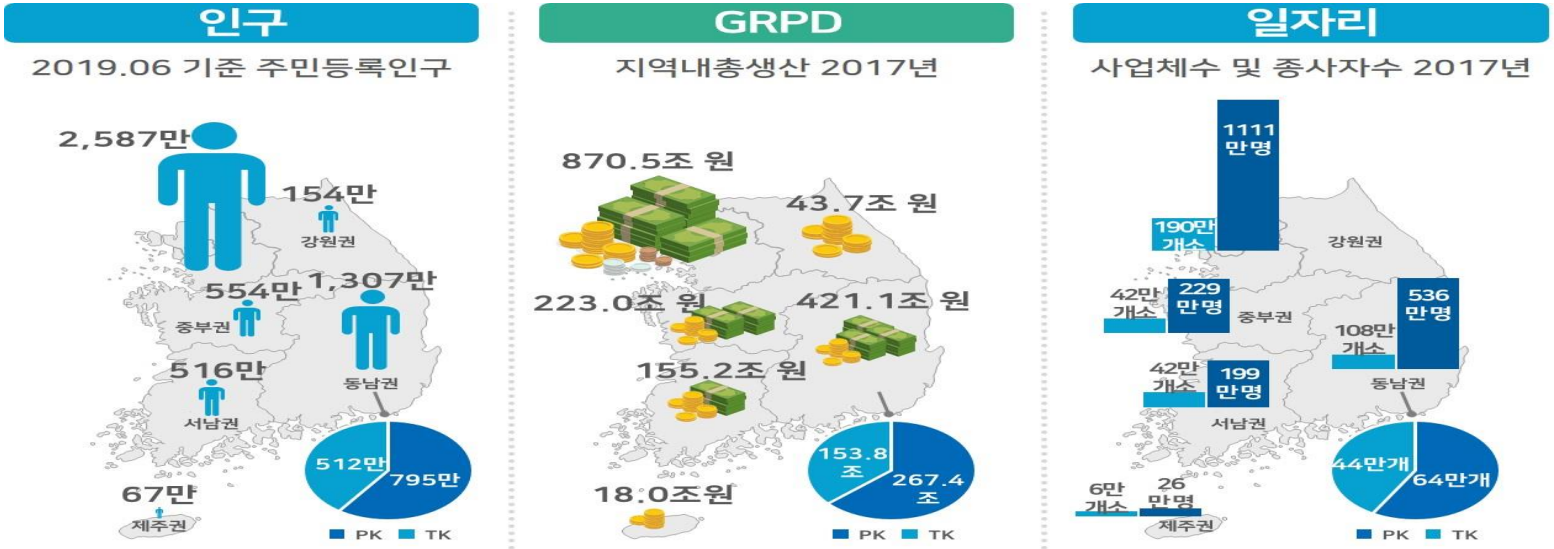


출처: 통계청(2020.6.29)

0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의 필요성

1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위기 확산

- 최근 경제사회적 변화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불리하게 작용→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쏠림 심화
  - 농산어촌 지역은 청년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산업 및 정부기반 무너질 위기에 봉착
  -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기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중국 등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과 세계경제 변동에 취약



출처: 강현수, 강민규(2020)
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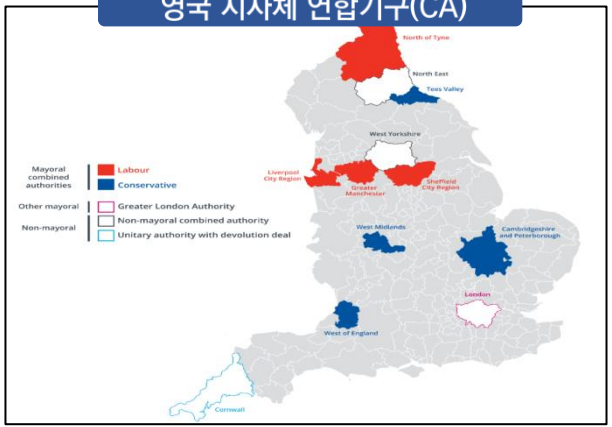
0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의 필요성

2 미래환경 대응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

- 기후변화, 4차 산업혁명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
  - 교통, 기후 등 기능별 유연한 권역 형성을 통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공동문제 해결, 융복합 네트워크를 통한 규모의 경제, 집적의 이익 실현
  - 세계적으로도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일본 등은 광역의 계획 권한 및 협상력을 강화하여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미국은 10개 메가리전(mega region) 구상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

미국 메가리전

영국 지자체 연합기구(CA)



프랑스 광역행정구역 개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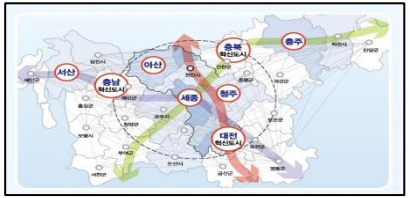
출처:박경현 등(2020)

0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의 필요성

3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적 협력 움직임 활발

-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움직임 활발
  - 동남권 메가시티, 대구·경북, 광주·전남, 충청권 등에서 특별지자체 설립 및 행정통합 논의 착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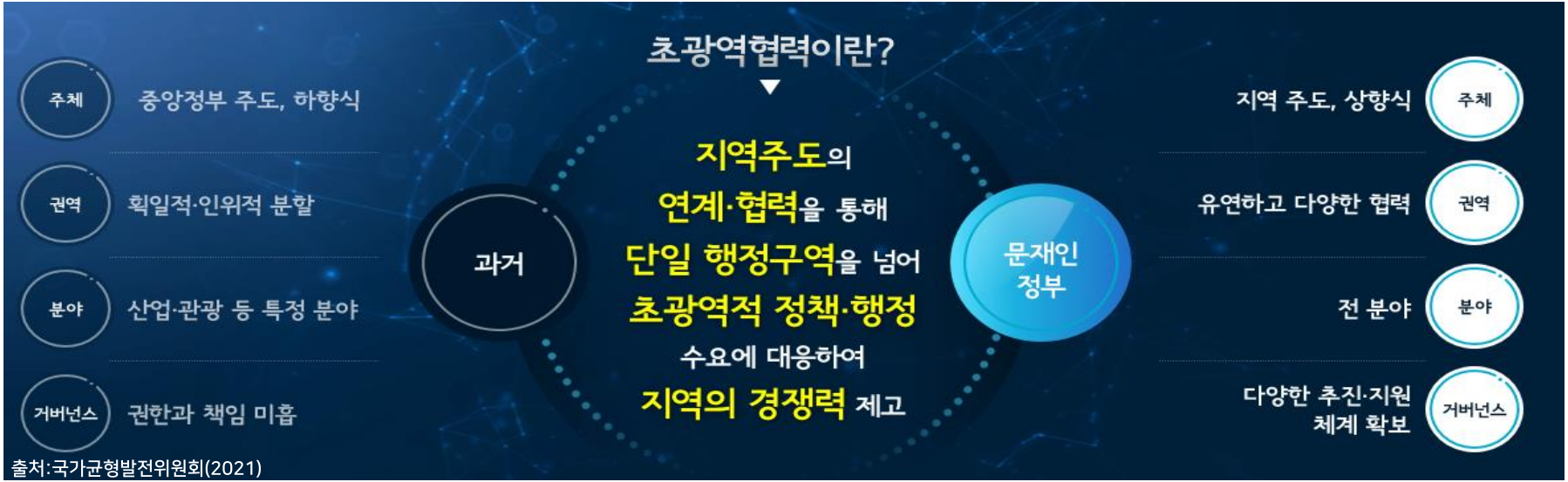
출처:국가균형발전위원회(2021)



04 초광역권 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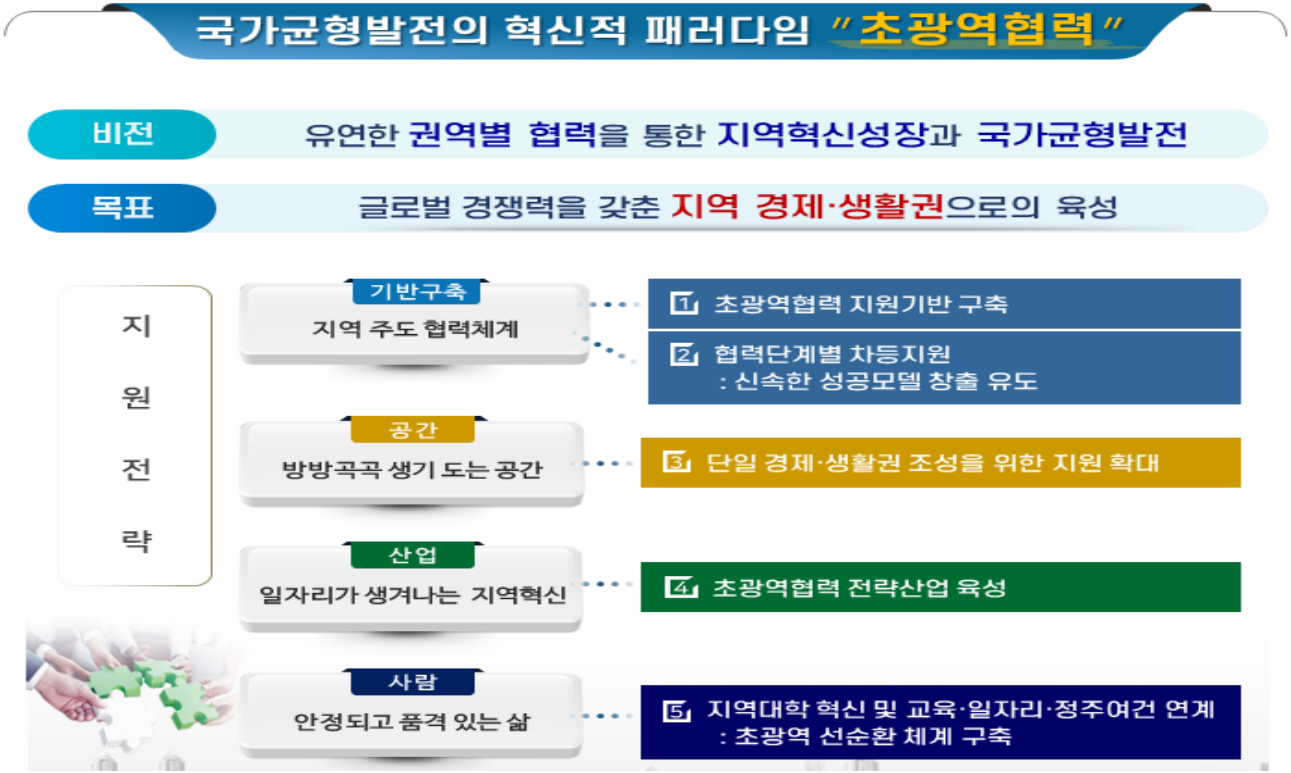
1 추진방향

-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재정지원 체계 등 기반을 구축하고,지역 주도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통합지원 체계 마련
- 지역 간 협력 단계별 차등지원으로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
- 국토교통·산업·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을 도입



출처:국가균형발전위원회(2021)

2 비전과 목표



출처:국가균형발전위원회(2021)

3 세부전략 : ① (공간) 단일 경제·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

- 네트워크 연계의 핵심요소인 광역 교통망 조성
  - (광역철도) 초광역권 핵심축인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, 지정기준 개선을 통한 광역철도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 등 초기 운영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강구
  - (광역교통시설) 철도와 연결되는 광역 BRT·환승센터, 순환형 도로망에 연결되는 방사축 신규 도입 등으로 중심부·주변도시 간 연결성 대폭 강화
  - (소외지역 맞춤형 교통) 대중교통 취약지에 저렴한 택시서비스(100원 택시) 및 대체버스(소형·콜) 지원 확대, 첨단기술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추진
  - (공항) 지방거점공항 중점투자 진행(가덕신공항은 '22년 중 사업추진방안 마련)
- 인재·자본·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단계별 거점 육성
  - (중심거점) 광역교통 중심지에 최고 수준 특례가 적용된 도심융합특구와 기업·주거·청년인재가 융합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하여 거점으로 육성
  - (자족거점)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주거플랫폼(주거+생활SOC+일자리) 확대,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·도시재생 추진 병행

3 세부전략 : ② (산업)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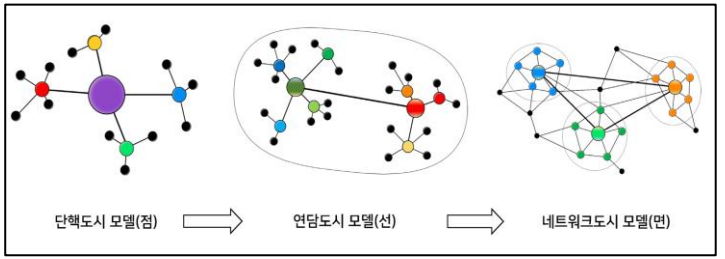
-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 선정·지원
  - 초광역권 단위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*하고 범부처 공동 지원(광역교통시설) 철도와 연결되는 광역 BRT·환승센터, 순환형 도로망에 연결되는 방사축 신규 도입 등으로 중심부·주변도시 간 연결성 대폭 강화
  - 제도 마련과 지역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선도, 후속사업 순차적 추진
- 초광역권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충
  - 초광역권 전략산업의 핵심 인프라 우선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(자족거점)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주거플랫폼(주거+생활SOC+일자리) 확대
  - 초광역 단위의 산학협력 및 산업·기술인력 공급체계 구축
  - 초광역권 산업지원을 위한 지역의 산업거점·혁신거점 마련 및 연계 강화
- 기업의 지역 투자 확대 환경 조성
  - 초광역지역의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투자 재원(펀드 등) 지원 검토
  -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 마련
  - 지역투자 촉진제도 체계화를 위한「지방투자촉진법」제정 등 검토

3 세부전략 : ③ (사람) 지역대학 혁신 및 교육·일자리·정주여건 연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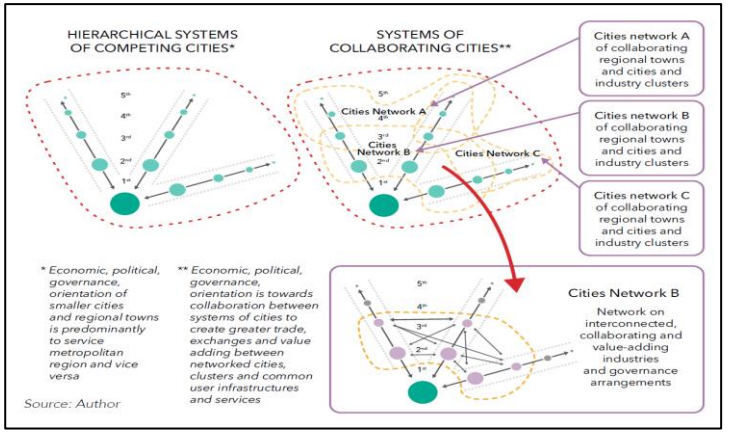
- 초광역 지역대학 혁신 및 지역인재 양성
  - 초광역권 공유대학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체계 마련
  - 초광역권 메가시티에 산·학·연 공간 융합 우선 지원
    * 지역혁신 플랫폼(교육)+도심융합특구, 캠퍼스 혁신파크(일자리·정주) 연계
    *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확대 검토 및 혁신도시 내 캠퍼스 이전·운영 지원
- 초광역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
  - 지역혁신플랫폼 간 단계적 연계, 확장·전환 지원 및 확대 검토
  - 고등교육 규제 혁신을 통한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 구축
    * 교육 분야 최초로 고등교육 규제특구(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) 운영
- 초광역권 단위 지역 협업체계 및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
  -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초광역 지역혁신 동력 확보
  -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 구축

4 시사점

- 대도시권 중심의 초광역권 중추기능 강화
  - 기업, 주거, 청년인재가 집중된 거점 육성
- 네트워크를 통한 인재, 자본, 일자리 선순환구조 구축
  - 광역철도망, 원활한 이동권 보장, 광역교통 서비스 사각지대 보완
-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육성 및 청년인재 양성
  -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초광역권 산업경쟁력 강화
  - 청년인구 지역 정착을 위한 인재 교육시스템 보완
- 초광역권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
  - “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” 신설(국무조정실장 총괄)
  - 부처별 정책·과제 점검 및 실행전략 마련, 행·재정적 지원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등 협의·조정, 지역별 맞춤 지원
- 지역주도의 유연한 초광역권 설정
  -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설치 및 안정적 운영 지원
  - 초광역특별협약 제도 명시



출처:진종헌(2020)



출처:Cities Alliance(2019)

05 지방 대도시권의 거점도시 육성 방안

1 초광역협력에서의 중심거점 육성

-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, 지역이 주도하는 “초광역협력”
  - 관계부처 합동「초광역협력 지원전략」발표(2021.10.14(목)) 보도자료

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,
지역이 주도하는 “초광역협력”
- 관계부처 합동「초광역협력 지원전략」발표 -

○ **공간적으로는 단일의 경제·생활권 조성** 지원을 확대한다.

- **광역철도를 활성화**하고, **광역 BRT 및 환승센터, 도로를 확대**하는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하여 **네트워크의 핵심인 광역교통망을 조성**한다.
- **대중교통 취약지**에도 저렴한 택시서비스(100원 택시 등) 및 대체버스 지원 확대 등 **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**한다.
- **광역교통 중심지**에는 범부처 지원이 융합된 **도심융합특구, 기업과 청년 인재**가 모이는 **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**하고, 주거플랫폼·투자선도지구·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**자족생활권을 구성**하여 **인재-자본-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거점을 육성**한다.

[1] [공간] 단일 경제·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

❶ 네트워크 연계의 핵심요소인 광역 교통망 조성

- **(광역철도)** 초광역권 핵심축인 선도사업 **절차 간소화**, 지정기준 개선을 통한 **광역철도 활성화** 및 역세권 개발 등 **초기 운영부담 경감 방안**을 적극 강구
- **(광역교통시설)** 철도와 연결되는 **광역 BRT·환승센터,** 순환형 도로망에 연결되는 **방사축 신규 도입 등**으로 중심부·주변도시 간 연결성 **대폭 강화***

* 초광역권의 추가 광역교통망 수요는 타당성을 점검하여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 등 추진

- **(소외지역 맞춤형 교통)** 대중교통 취약지에 **저렴한 택시서비스**(100원 택시) 및 **대체버스**(소형·콜) 지원 확대, 첨단기술 기반 **수요응답형** 교통서비스 추진
- **(공항) 지방거점공항 중점투자** 진행 (가덕신공항은 '22년 중 사업추진방안 마련)

❷ 인재·자본·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단계별 거점 육성

- **(중심거점)** 광역교통 중심지에 **최고 수준 특례***가 적용된 **도심융합특구****와 기업·주거·청년인재가 융합된 **캠퍼스 혁신파크 조성**하여 **거점**으로 육성

* 각종 특구 중복 지정, 창업패키지사업(중기부), 지자체·대학 지역혁신사업(교육부) 등 종합지원
** 초광역권 내 성장거점 확대를 위해 지방광역시(5곳) 외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시에도 추가 추진

❖ **초광역권 혁신도시**에 **발전기금을 조성**하고, **지역인재 채용을 확대**하는 등 **거점 역할***을 본격적으로 수행
* 혁신도시형 도청산단(비즈파크), 혁신융합캠퍼스, 공유오피스 등을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
❖ 우수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**지역 맞춤형 융복합 물류 플랫폼* 조성**
* 육·해·공 물류통합운영모델(트라이포트) 검토 등('22년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연구 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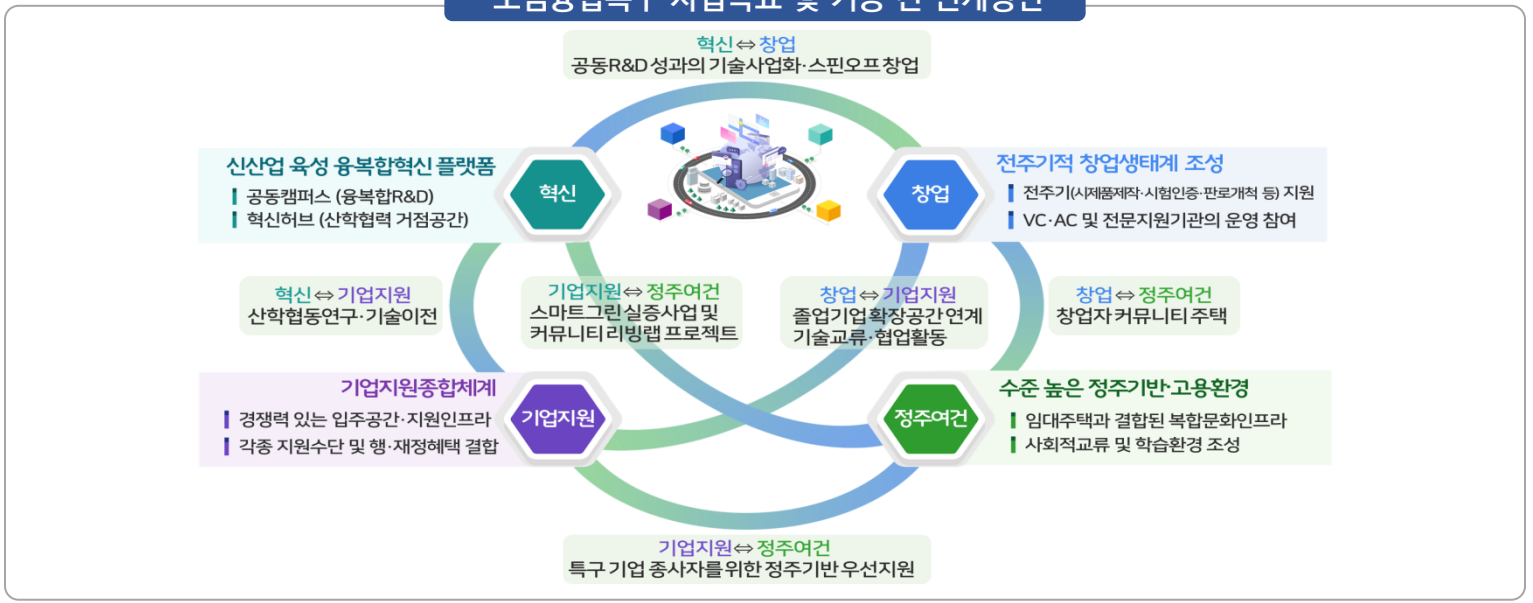
- **(자족거점)**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**주거플랫폼**(주거+생활SOC+일자리) **확대***,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**투자선도지구·도시재생 추진 병행**

* (기존) 농산어촌(읍·면 지역)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→ (변경) 시·군(읍·면·동) 단위로 확산

2 도심융합특구

- 사업목표 : 지방광역권의 자생적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도심부 융복합 혁신공간 마련
- 핵심기능 : 혁신, 창업, 기업지원, 정주환경의 네 가지 범주로 특화된 인프라와 지원사업 마련

도심융합특구 사업목표 및 기능 간 연계방안



3 도심융합특구의 다양한 기능

- 도심융합특구와 기존 특구사업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특구 내 다양한 유치기능을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연계사업 추진이 필요

비교사례	단독기능형 사업의 한계	도심융합특구의 차별성
연구단지형 (연구개발특구 등)	• 연구기능 위주의 고립된 입지로 인해 지역산업주체와의 기술협력 미흡 ※ 연구개발특구는 배후산단 지정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나 여전히 연계활동은 저조	• **(혁신↔기업지원)** 혁신기관과 현장기업이 함께 입지해 활발한 협업활동 추진 • **(혁신↔창업)** 혁신기관 종사자의 기술사업화 및 스핀오프 창업 지원
창업보육형 (창업보육센터 등)	• 보육기관 졸업 후 확장공간 부재 (지역이탈) •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기성기업 및 산학연 주체의 네트워크가 부재	• **(창업↔기업지원)** 보육기관 졸업 후 특구 내 확장공간에 입주해 지속적인 성장 지원 • **(창업↔혁신)** 특구 내 다양한 혁신기관이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공동 운영
기업입주형 (산업단지 등)	• 생산기능 위주로 편성된 공간구성 탓에 혁신기능과 정주기반 부족 (인재유치 불리) • 업종이 제한된 대규모·분양중심 공급에 따라 초기단계 혁신기업 유입이 제한	• **(기업지원↔정주기반)** 수준 높은 정주기반과 결합된 경쟁력 있는 산업공간 마련 • **(기업지원↔창업)**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거점으로 창업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지원
정주기반 결합형 (신도시 자족시설 등)	• 신도시 자족용지는 기술분야를 특화할 앵커기업·혁신기관이 부재해 기업유치나 스타트업 육성이 어려움	• **(정주기반↔기업지원)** 앵커기업 및 산학연 혁신기관 유치를 통해 특화산업 육성 • **(정주기반↔혁신)** 실증사업·리빙랩 운영을 통해 전체 도시기능과 연계된 혁신거점화

05 지방 대도시권의 거점도시 육성 방안

4 도심융합특구의 혁신기능 추진방안

- 공동R&D캠퍼스 및 산학협력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하드웨어 기반시설 구축
-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체계 지원 및 규제혁신과 공동R&D 및 기술사업화 지원

혁신기능 추진방안 및 부처협업사업 구상

5 도심융합특구의 창업기능 추진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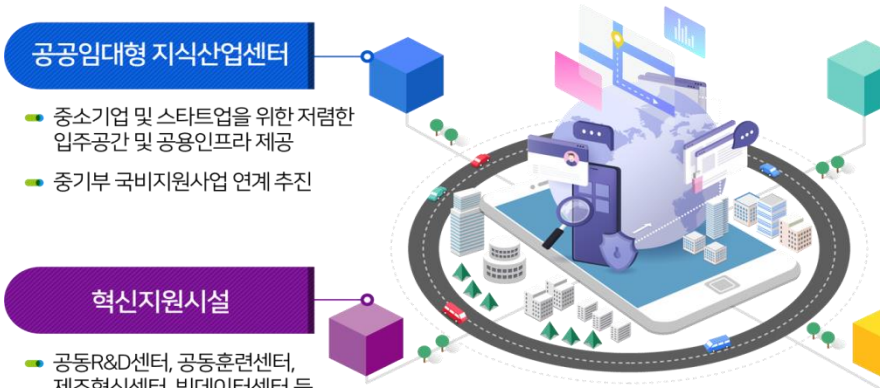
- 창업자 및 창업기업 입주공간과 창업지원 인프라 조성을 통한 하드웨어 기반시설 구축
- 특성화된 창업보육 프로그램 및 지원기관 유치, 특구 내 타 기능 연계를 통한 지원사업 추진

창업기능 추진방안 및 부처협업사업 구상

6 도심융합특구의 기업지원기능 추진방안

-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및 기타 기업지원시설 조성을 통한 하드웨어 기반시설 구축
- 다양한 지원수단 및 인센티브 결합

기업지원기능 추진방안 및 부처협업사업 구상



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
-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저렴한 입주공간 및 공용인프라 제공
- 중기부 국비지원사업 연계 추진

기업지원서비스
- R&BD, 기술사업화, 시제품제작, 시험·인증·인허가 등 전주기 지원
- 세제 및 행재정혜택, 규제혁신 원스톱 서비스 운영

혁신지원시설
- 공동R&D센터, 공동훈련센터, 제조혁신센터, 빅데이터센터 등
- 특구 육성방향을 고려한 맞춤형 혁신인프라 유치

스마트그린인프라
- 스마트물류센터, 에너지통합플랫폼,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
- 특구 및 전체 도시기능과 연계한 스마트그린기술 실증사업 추진

7 도심융합특구의 정주기능 추진방안

- 근로자·창업자 임대주택 조성, 정주환경 지원사업 패키지 결합을 통한 하드웨어 기반시설 구축
- 청년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사업, 사회적 교류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

정주기능 추진방안 및 부처협업사업 구상

안정적인 정주기반 마련
- 국토부 창업지원주택,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,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
- 창업자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

다양한 정주서비스 결합
- 생활SOC복합화 및 문화인프라 조성사업 추진
- 상생상가, 아트센터, 복합몰 등 상업·편의기능 연계

청년 고용환경 개선
- 대중교통, 보육여건, 주거비지원 결합 (고용부·국토부·산업부)
- 스마트그린도시, 활력거리 등을 연계해 쾌적한 근로여건 조성

사회적 교류·학습여건
- 청년인재들이 다양한 집단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 조성
- 특구 참여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

06 소멸위기지역의 현황 및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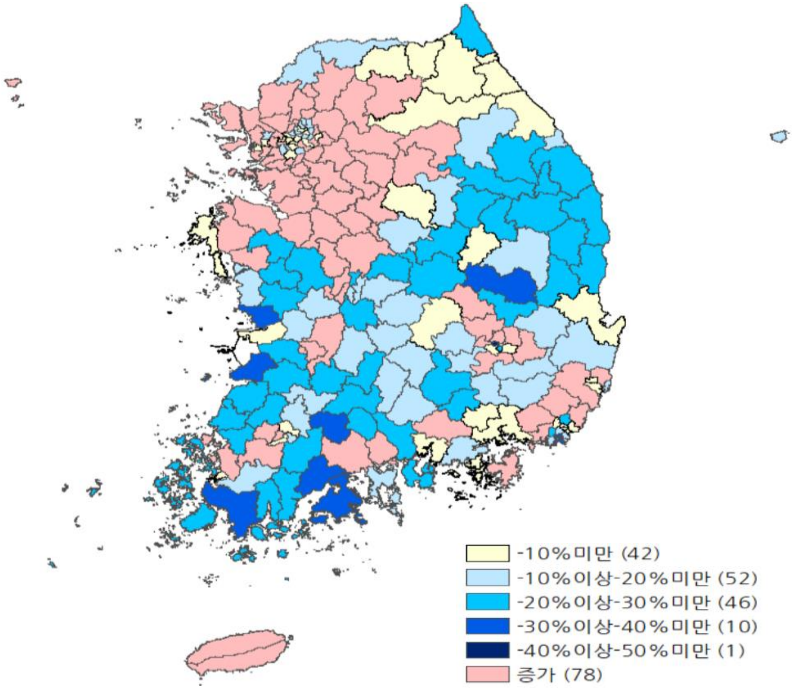
1 지방 인구의 현저한 감소 및 자립기반 약화

- 지난 20년간 전국 지자체의 151곳(66%)는 인구감소 경험
  - 지난 20년간 총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% 이상 인구감소 시·군·구는 57곳(38%)에 달함
  - 인구증가 지역은 수도권 지역과 일부 대도시에 한정

〈2000~2020년 기간 동안 인구감소율 분포〉

인구감소율	지자체 수	인구수
-10% 미만	42개(28%)	1,243만명
-10~-20% 미만	52개(34%)	801만명
-20~-30% 미만	46개(30%)	286만명
-30~-40% 미만	10개(7%)	67만명
-40% 이상	1개(1%)	17만명
계	151개(100%)	2,414만명

2000~2020년 기간 동안 인구증감률



출처 : 행정안전부(2021),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

2 지방의 인구저점 미 도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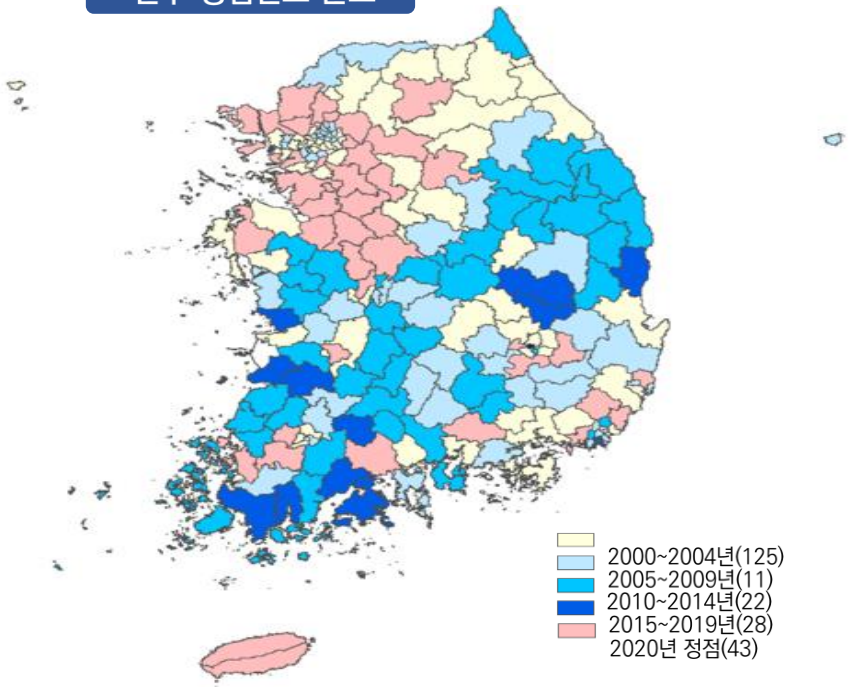
- 인구 정점은 2000년대(54%) 초반에 집중, 인구 저점은 2020년(52%)에 집중

  - 2000년대 초반 인구 정점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, 2020년 인구 저점은 전남, 경북 등 비수도권에 집중

〈인구 정점연도와 인구 저점연도 분포〉

연도	인구정점연도	인구저점연도
2000~2004년	125개(54%)	67개(29%)
2005~2009년	11개(5%)	20개(9%)
2010~2014년	22개(10%)	5개(2%)
2015~2019년	28개(12%)	19개(8%)
2020년	43개(19%)	118개(52%)
총계	229개(100%)	229개(100%)

인구 정점연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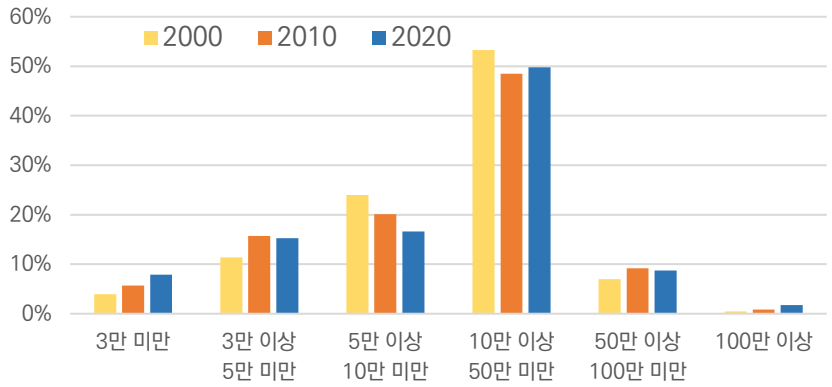


출처 : 행정안전부(2021),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

3 인구의 공간적 편재와 양극화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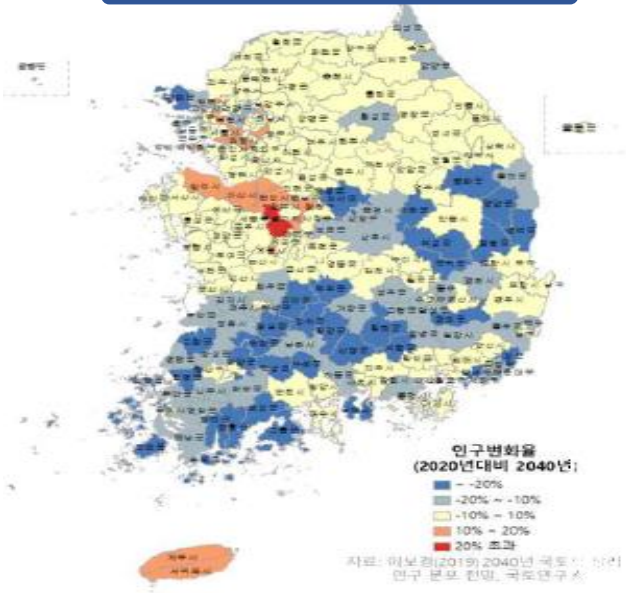
- 지자체 인구 규모별 양극화와 수도권 및 대도시로 집중 심화 전망
  - 인구 3만 미만 시·군·구는 3배(6개→18개), 100만 이상 시·군·구(1개→4개)

인구 규모별 지자체수 변화(2000~2020)



✓2000~2020년 기간동안 순증가 인구(443만명)는 50만명 이상 시·군·구와 3만 미만 시·군·구에서 증가한 반면, 3만 이상~50만 미만 시·군·구에서 감소

2020년 대비 2040년 인구변화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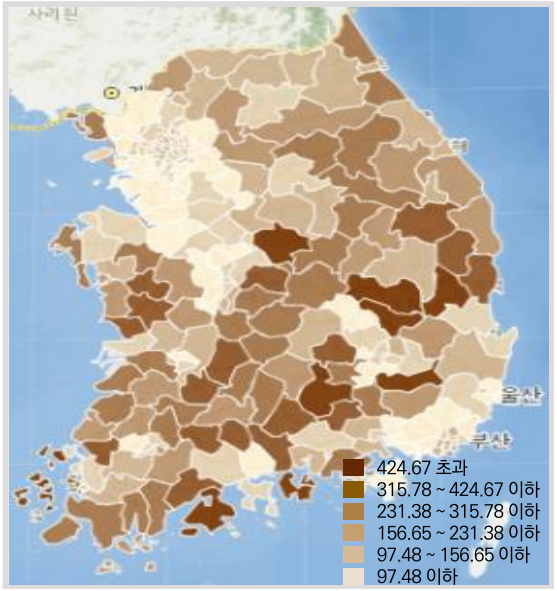


출처 : 행정안전부(2021),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

4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 악순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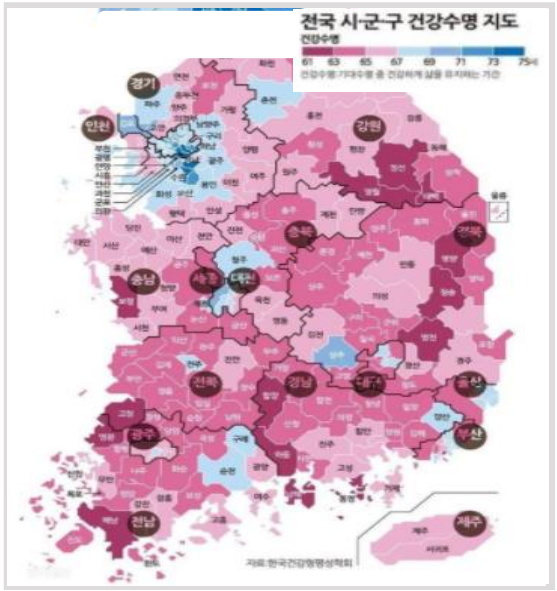
-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·경제·건강 취약계층 집중

노령화 지수(2019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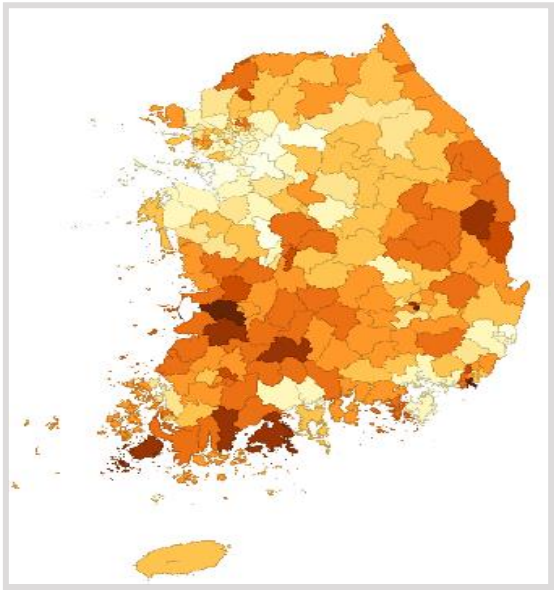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(SGIS)

건강수명(2020)



자료: 한국건강형평성학회(2020)

기초생활수급자 비율(2015)



자료: 장인수(2021, 한국보건사회연구원)

출처 : 행정안전부(2021),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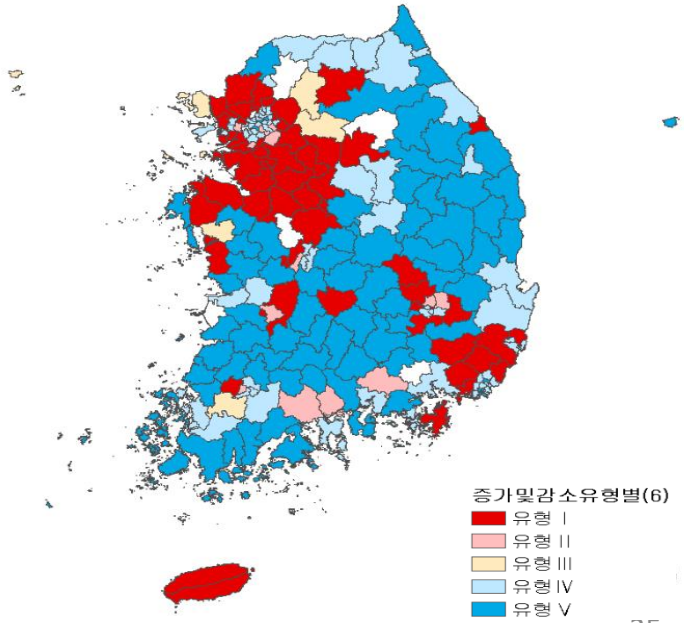
5 지방 인구감소 요인과 인구댐 역할

- 사회적 이동(인구유출)이 지방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
  - 인구감소 지역은 주로 IV유형(자연적 증가, 사회적 감소)과 V유형(자연적 감소, 사회적 감소)

구분	자연 증감	사회 증감	유형	개수	행정체제별			인구 규모별			
					시	군	구	5만 미만	5만~10만 미만	10만~50만 미만	50만 이상
인구 증가 지역	+	+	Ⅰ	53	36	8	9	2	4	34	13
	+	−	Ⅱ	13	7	−	6	−	−	9	4
	−	+	Ⅲ	7	1	6	−	1	3	3	−
	소계			73	45	14	15	3	7	46	17
인구 감소 지역	+	−	Ⅳ	72	18	6	48	5	8	51	8
	−	−	Ⅴ	78	14	60	4	43	23	12	−
	소계			150	32	66	52	48	31	63	8

※ 세종시 및 분류불가 지자체(5) 제외하고 분석

인구증감 요인에 따른 지역 유형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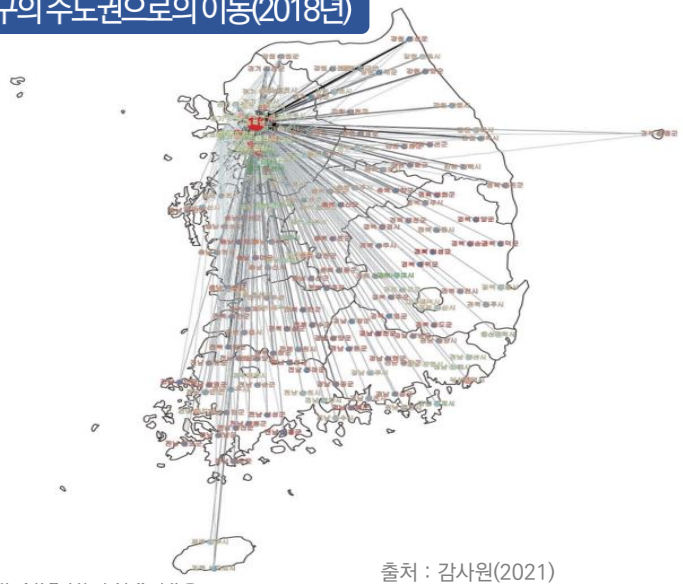


출처 : 행정안전부(2021),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

6 지방의 고령화 심화 및 청년 유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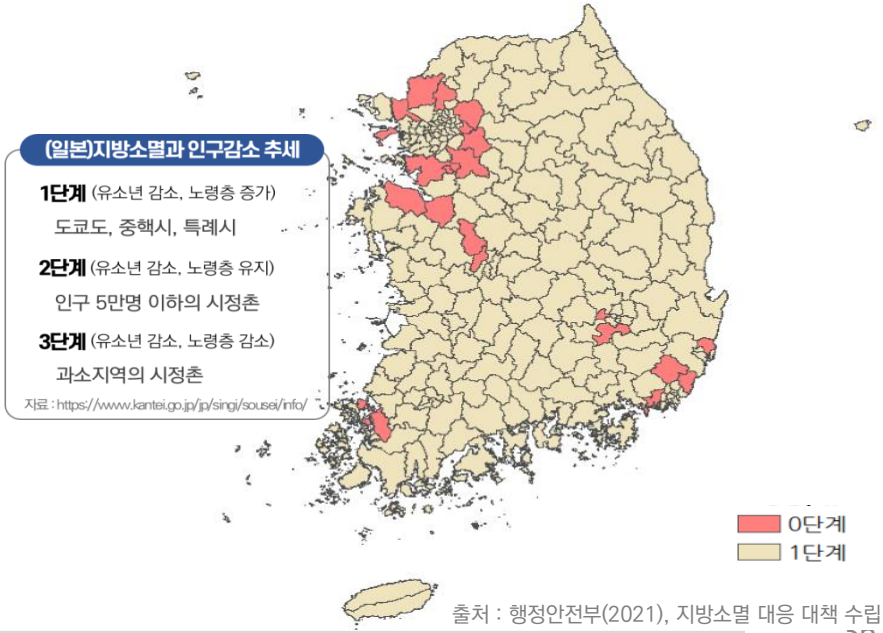
- 시·군·구의 92%가 유소년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의 인구구조 형태(1단계)
  - 시·군·구의 92%(210개)가 1단계, 8%(9개)는 0단계
-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집중 심화

청년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이동(2018년)



출처 : 감사원(2021)

지방소멸 단계(2000~2020)



출처 : 행정안전부(2021),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

07 소멸위기지역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

1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별 주요 정책과제(안)

전략명	주요 정책과제(예시)
전략 1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있는 생활 실현	▶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여건 개선 ▶ 방과후학교 운영경비 지원, 수도권 대학의 이전 및 유치 ▶ 마을주치의 제도, 방문진료 허용 등 의료기반 확충
전략 2 매력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 억제	▶ 주거지원 및 기반 확충 및 ▶ 노후.유휴시설 관리 및 문화적 재생 지원 ▶ 생활인구 확충, 활성화구역 지정 및 특례 ▶ 교통.물류 기반 확충, 안심 생활공간 조성 등
전략 3 지역자원 기반 생산·소득 및 좋은 일자리 확충	▶ 지역향토산업 육성 지원 등 지역활력 증진사업 우선 실시 ▶ 공공기관 및 기업체 이전 지원 및 세제, 보험료 혜택 ▶ 지역소재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상한 연장 등
전략 4 지역간 교류·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 확산	▶ 도시-지방간 교류 촉진시책 추진 및 지원 ▶ 생활권 단위 시설 및 공공서비스 공동이용 등 촉진 ▶ 생활권 설정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구성 지원
전략 5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 강화	▶ 지역 주도-중앙 지원의 기본계획 수립 ▶ 지방소멸 위기대응 성과평가 및 활력도 측정 ▶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, 우수사례 발굴·확산 ▶ 지방소멸대응기금, 중앙-지방 협력협약, 펀드 등 재원 조달 강구

자료 : 행정안전부(2021),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

감사합니다

국토연구원 KRIHS